

보도설명자료

('22. 8. 19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지원예산 미흡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수요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, 새 정부는 수요효율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

(8.19일자 이데일리 「말뿐인 ‘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’, 지원 예산은 10년 만에 반토막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정부는 수요 효율화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조하고는 있으나, 관련 예산이 10년새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하였고, 앞으로의 예산 확보 계획도 미비해 새 정부의 정책이 공수포에 그칠 우려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'13년 이후 과거 2개 정부기간동안 에너지 수요 효율화 예산이 감소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, 이는 정책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지원 대상 조정 등 정책적 이유*에 주로 기인함

* ('13) 9,201 → ('15) 7,966 → ('17) 6,189 → ('19) 5,248 → ('21) 6,194 → ('22) 6,041억

→ 융자지원사업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('15), 상업용 바이오폐기물 신재생e설비 설치용자 제외('17)에 주로 기인

- 새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구현하는 한편, 수요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가정, 건물, 산업 등 핵심 다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

- 앞으로도 수요 효율화 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, 예산투입 없이도 수요 효율화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원리와 제도에 기반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

*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전면 개편, 산업부문 자발적 효율혁신협약 체결, 연비(전비)제도 정비, 건물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등

※ 문의 : 에너지효율과 허정수 과장(044-203-5140) / 이상은 주무관(5147)